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ranch Establishment Planning of National Library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1 지역분관 건립의 기본모형 |
| 2.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의 배경과 논거 | 3.2 중앙관-지역분관의 운영체계 모형 |
| 2.1 지역분관 건립의 국제 동향과 배경 | 3.3 중앙관-지역분관의 역할분담 모형 |
| 2.2 지역분관 건립의 필요성과 논거 | 3.4 지역분관의 자료보존센터 모형 |
| 3.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의 중장기 모형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도서관은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 자국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유형의 정보자료를 수집·보존하여 당대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완벽하게 전수하여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선진국은 여러 지역에 위치하는 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서울중심의 완전 집중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집중형 국가도서관 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거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립 지역분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national library is a library specifically established and administrated by the government of a nation to serve as the repositor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that country. National libraries are generally a county's designated national repository, collecting literature published in the country, in the language of the country, or about the country they represent.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national libraries have more than one branches at many different locations. Its system is called the distributed national library system. Bu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maintains a centralized library system located in Seoul. This research, which it tries to pay attention in this problem point extracted a logical ground and suggested the mid-long term basic plan(S-shaved Branch Library Project) for a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convert and reconstruct from centralized system to centralized-distributed system.

키워드: 국가도서관시스템, 국립분관, 분관계획, 국립분관 설립,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System, National Branch Libraries, Branch Establishment Planning,
National Library of Korea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9월 15일

1. 서론

어느 나라든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자료를 최대한 수집·보존하여 당대에 제공하고,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도서관은 다른 어떤 관중이나 도서관보다 '수집자료의 포괄성 내지 망라성, 축적의 누적성과 통시성, 완벽한 보존성'을 중시해야 하며, 그 결과로 존재이유가 규정되고 국가 지식정보의 보루라는 정체성이 배태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은 국가도서관의 설립근거와 사회적 책무를 행정체계와 법적 장치로 보장하고 있다. 소위 정부조직상의 편제, 관련법률(도서관법, 국회법, 저작권법 등)에서의 규정, 국가도서관법 또는 납본법의 제정 등이 반증한다. 그러나 조직체계와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정교하더라도 내재된 공리와 명제를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수도에 위치하는 단일의 건물일 경우에는 국내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선진국은 여러 지역에 복수의 주제관(분관)을 설치하여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 60년간 서울중심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그 결과, 실정법상 가장 핵심기능인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이용'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보존과 이용'은 수장공간의 확장성과 봉사대상의 전국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집중형은

참여정부가 설정·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개혁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연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총괄하는 대표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중화 정책을 고수할 경우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지역분산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배치된다. 게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은 각각 다양한 지식정보(공공정보, 행정정보, 생활정보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제별 또는 기능별로 전문화된 국가도서관의 지역분관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2002년에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으나, 대개 50억원~150억원을 투입하는 중규모 이하이며,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자료공간은 한계수장을 육박하고 있어 대형 내지 공동보존용 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내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 수단적 방안 중의 하나가 국가도서관의 지역분관 건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중심의 완전 집중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구축해야 하는 논리적 및 현실적 근거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지식정보의 분산형 보존관리와 대국민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분관 건립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의 배경과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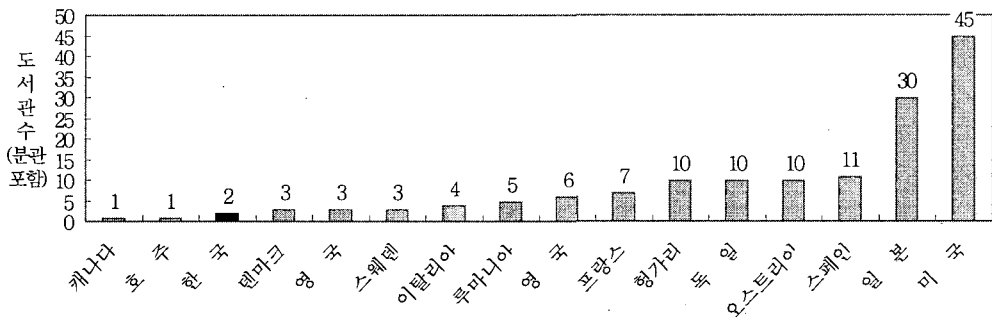
2.1 지역분관 건립의 국제 동향과 배경

일반적으로 분관(branch library)은 '중앙관 또는 본관에 부속된 소규모 도서관 내지 서비스 포인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속에는 지리적 분립, 건물과 공간의 상대적 영세성, 주제나 대상의 제한성 등이 함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가나 관중에 따라 분관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다만 나라 전체를 봉사 대상으로 하는 국가도서관은 그 권역이 지역사회로 제한되는 공공도서관이나 캠퍼스 내외에 여러 주제별 도서관 내지 분관을 유지하는 대학도서관과 사정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서관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분관건립을 통한 지리적 분산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림 1>처럼 많은 국가에서 중앙관 외에 다양한 명칭을 부여한 지역관 내지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역사적 배경과 동향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배경은 자료공간의 부족

에서 찾을 수 있다. 대다수 국가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납본을 통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왔기 때문에 연차증가량이 다른 어떤 관중보다 훨씬 많다. 그 결과, 수장공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보존전용 내지 다른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복수 단위의 도서관시스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왕실문고를 모태로 발전한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의 공간확장과 다관체제가 이를 대표한다.

둘째, 통상 자국의 수도에 위치하는 국가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려면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하는데 지리적 및 구조공학적 제약이 많아 지방에 분관을 건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미 19세기 이전에 콜롬비아 국가도서관(1777년)과 엘살바도르 국가도서관(1870년)이 지방에 분관을 설립하였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영국의 웨일즈국립도서관(1909년),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1925년)처럼 장기 보존과 이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분관건립이 성행한 바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6개 도시(피렌체, 나폴리, 로



<그림 1> 주요 국가도서관의 구성단위(중앙관+분관) 비교

마 등)에, 유고슬라비아는 베오그라드 등 6곳에 국가도서관의 분관을 설치하였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호주 등은 별도의 국가도서관을 설립하여 의학, 농학, 과학 등을 분산 배치·관리하여 왔으며, 과거 서독도 국가장서를 지역별로 분산·관리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남미의 여러 국립도서관은 출판연대가 오래된 자료를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고 있다. 반면에 아일랜드, 멕시코, 덴마크 등은 1970년대에 일부 장서를 대학으로 이전하였다(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編輯委員會編 1988, 176-184).

셋째, 자국의 정치적 역정이나 권력구조의 변화가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독일은 분단상태에서 각각 국가도서관을 유지하다가 통일을 계기로 동독의 라이프찌히 도서관과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이 단일의 국가도서관시스템으로 재정비되었다.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도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이 각각 국가도서관으로 존속하고 있으나, 단일국가로 통일되면 하나의 국가도서관시스템 아래에 봉사권역이나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국가장서의 주제별 수집·보존과 서비스 강화전략이 복수의 국가도서관을 출현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미국의 국립의학 및 국립농학도서관, 영국 BL 산하의 신문보존소, 독일 DEZ의 베를린 독일음악아카이브, 프랑스 BnF의 오페라 도서관 박물관과 아비뇽 소재의 장 빌라르판 덴마크의 수의농학도서관과 과학의학도서관, 멕시코의 국립신문잡지도서관, 인도의 국립과학 및 국립의학도서관, 일본 NDL의 지부동양문고

등을 들 수 있다(윤희운 2006, 11-23).

다섯째, 비교우위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이 새로운 성격의 분관을 태동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단연 영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런던의 국립중앙도서관(NCL : National Central Library)과 보스턴 스프의 NLLST를 통합하여 BLLD(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로 개칭한데 이어 현재의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로 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문헌제공봉사의 중심기관으로 부상하였다. 후자는 2002년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인 교토에 과학기술자료 중심의 관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아시아권 학술정보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세이다.

여섯째, 정부 및 국가도서관의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적 의지도 특이한 명칭을 부여한 분관을 등장시키고 있다. 예컨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분관인 '국제어린이도서관'과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반증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사조도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 문제와 맞물려 국가도서관시스템의 분산화 및 복잡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영국 BL의 BLDSC, 일본 NDL의 관서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산분관' 건립 제안 등이 사례에 속한다.

2.2 지역분관 건립의 필요성과 논거

모든 나라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조직형성의 외적 원리인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발

전하여 왔다. 전자를 대표하는 미국은 명목상 LC(의회 + 국가중앙)를 정점으로 복수의 주제별 국가도서관(의학, 농학, 교육학 등)을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를 대표하는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을 중앙관으로 삼고 베를린 음악도서관과 동독의 라이프찌히 도서관을 통합하여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재구축하였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통합과 분화 또는 역으로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배경은 국가장서 수장공간의 부족,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역사적 궤적과 정치적 상황요인, 주제별 자료보존 및 서비스기능의 강화, 비교우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이며, 이들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금도 주요 선진국은 분화에 더 치중하여 다종다양한 분관을 설립하고 있어 시스템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1945년에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왜 서울 이외의 지역에 분관을 설립하지 않았는가. 그럴 필요나 당위성이 없었는가 아니면 중앙위주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인가. 반면에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서울과 대각점에 위치한 부산까지의 소요시간이 3시간에도 미치지 않는데 분관계획이 필요한가를 반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지

역분관은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과 논거는 다음의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분관 계획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수장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다. 현재 중앙관의 자료실 면적을 포함한 서고공간은 총 42,919㎡(본관 26,338㎡, 자료보존관 14,285㎡, 학위논문관 2,296㎡)¹⁾으로 선진 5개국의 국가도서관과 비교할 때 절대 부족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은 2002년의 소장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최소한 2천만권을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1㎡당 수장기준(개가서고 : 185권, 보존서고 : 274권)을 적용하면 개가서고로 운영할 경우에는 60.3%, 보존서고는 41.2%, 양자를 절충할 경우에도 52.6%나 부족하므로 2020년에는 현재 서고공간의 2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재의 위치에 신축 중인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서고공간이 그 일부를 감당할 수 있으나, 건물의 연면적이 11,500㎡에 불과하므로 큰 의미가 없고 따라서 도심 외곽지에 별도의 보존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의 유사한 사례(영국의 BLDS, 일본의 관서관 등)를 감안하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방에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되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이 전국으로 이전되는 분산 정책에 맞추어 사고와 발상을 전환하여 지역분관 또는 보존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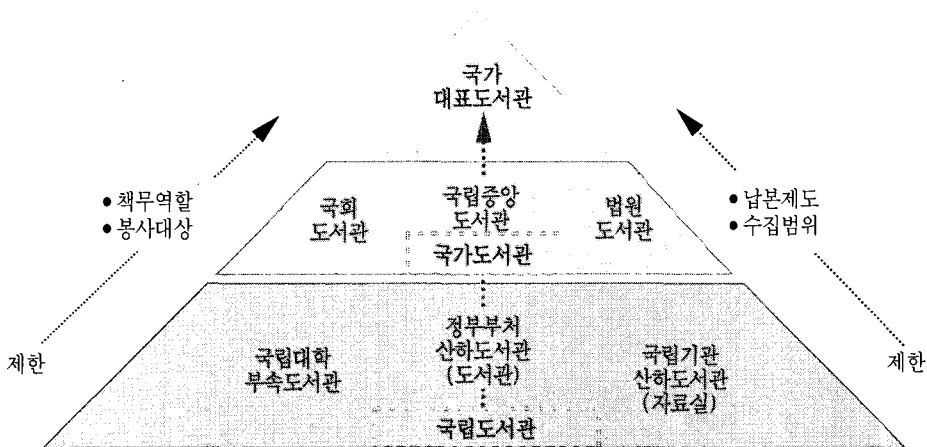
1) 연면적은 본관(반포동)의 자료실 면적(12,434㎡)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실 면적(2,296㎡)을 포함한 수치이다.

둘째, 지역분관 설립계획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전략적 매뉴이다. 어느 나라든 국가도서관의 제도적 정체성은 <그림 2>처럼 정부가 설립한 여러 '국립도서관' 가운데 직접 운영하는 국가 수준급의 소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정법에 '대표성'을 규율할 때 보장된다. 이를 정당화하는 양대 공리는 납본제도에 기반한 자국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모든 국민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와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의 '설립-운영-대표성 부여'라는 상향식 구조를 인정한다면 행정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대표도서관이라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전면 개정안인 '도서관법'이 국회 공청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위 '대표성' 논쟁으로 비화된 바 있다. 이러한 정체성 시비를 차단하려면 권역별 거점형 분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분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역

량을 제고시키는 정책적 수단이다. 한 나라의 국가도서관은 내적으로 자국의 지식정보를 농축시킨 보고와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자국의 지적 기여와 총체적 정신문화를 대변한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일의 사이트를 고수하는 한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 지식정보센터 및 모든 관중의 성장·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체'로 각인되는데 한계가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권역별 허부조직이 없어 국가정책의 중개기능과 위임형 집행기능이 취약하다. 지역단위에서 국가 도서관정책의 실효적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국가장서와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단위 분관건립의 논거는 충분하고 타당하다.

넷째, 지역분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공간 부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이미 2002년에 수립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에서도 "자료 보존공간 부족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들의 공통된 현안이다.



<그림 2> '국립-국가-국가대표'도서관의 상관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보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 재난대비를 위한 백업센터는 본관과 100k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공동보존센터의 필요성을 적시한 바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2, 141). 또한 지난 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3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시·도지사(교육감 포함)에게 자료폐기와 제적을 포함한 장서관리의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2006년 2월 8일자로 제시한 ‘법령정비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 단순히 제적 또는 폐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보존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일반열람실의 축소 등의 방식으로 우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해방 이후에 설립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자체 산하의 공공도서관은 그 동안 수집·축적된 자료를 더 이상 수장할 공간이 없어 폐기에 대한 재량권 부여와 공동 보존방안을 제시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자료공간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대한 재정부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로 국립 지방분관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분관의 건립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의 기초에 부합한다. 2003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 선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2004년 8월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

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었다. 전자는 2005년 2월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대에 18개 정부부처(12부, 4처, 2청)와 23개의 소속기관 및 1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하는 것이며, 후자는 동년 6월 24일자로 총 176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12개 시·도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요체는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기 때문에 국가도서관시스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으로 이전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백업하려면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을 주도할 국립 지방분관을 권역별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정법의 근거조항도 지역분관 건립의 논거로 간주할 수 있다. 2006년 9월 8일자로 통과된 새로운 법률인 「도서관법」 제18조 제2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 10월에 발표된 중장기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도 향후 ‘지역보존관’의 설립을 전략적 추진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 비전의 최종 목표는 ‘지력강국’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총 4개의 하위비전(영역별 목표) 중에서 그 첫 번째가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이며, 5개의 추진과제(장서확충을 위한 제도의 확립과 정비, 자료의 수집기능 강화, 디지털 정보자원의 확충 및 아카이브 구축, 한국 원형 콘텐츠의 발굴과 수집, 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전송)를 설정하고 있

다. 그 가운데 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네 번째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권역별 자료보존관 건립'을 <표 1>과 같이 2006~2010년까지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5, 50-51).

3.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의 중장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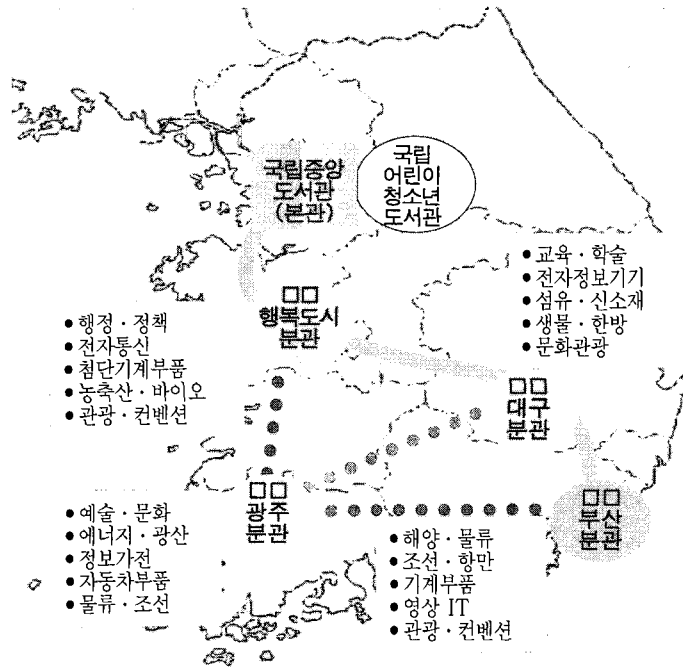
3.1 지역분관 건립의 기본모형

중장기 기본계획의 모형은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재구축'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이론적 지주로 삼아야 한다. 전자는 외연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비교우위 내지 배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핵심기능에 주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국가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논거이다. 후자는 지역 거점형 국립분관이 국가장서의 접근포인트, 지역단위의 통합형 자료보존센터, 거시적인 도서관정책과 발전계획의 실행창구, 중앙관과 지역도서관의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수준이 제고되고 그 나비효과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대 지주에 기초한 국립분관 건립계획의 중장기 기본모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국토 구상 T/F팀'이 제안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확정되어 실행 중인 '경부축 중심의 성장축(산업에너지 벨트)과 백두대간 및 농·산·어촌지역의 생명축(생명에너지 벨트)의 연계·통합형 상생공간으로의 재편구상' 가운데 경부축 중심의 성장축을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그림 3>처럼 제안한다. 이 'S자형 분관건립 프로젝트'(S-shaved Branch Library Project, 약칭 SBL Project)의 요체는 현행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기본구조인 서울 소재의 중앙집중시스템(중앙관-학위논문관)을 서울과 지방의 집중-분산시스템(중앙관-거점형 분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요컨대 가칭 'SBL Project'의 성격은 시스템적 집중화와 지리적 분산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소위 '집중-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이다. 부연하면 서울 소재의 중앙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지방에 건립할 4대 거점형(부산·경남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국립분관을 한국의 중추 성장벨트인 경부축에 위치·연계함으로써 국가 전략인 신국토 재편구상에 부합하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주민의 국가장서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의 스펙트럼을 최대로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권역별 '자료보존관' 건립계획(2006~2010)의 근거

핵심내용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 장서확충을 위한 제도의 확립과 정비	① 국내 도서관 자료보존기능 강화
	■ 자료의 수집기능 강화	② 보존매체의 다양화 및 매체별 전문인력 확보
	■ 디지털 정보자원의 확충 및 아카이브 구축	③ IFLA PAC 한국센터 지정 추진
	■ 한국 원형 콘텐츠의 발굴과 수집	④ 국내 자료보존처리센터 역할 수행 및 권역별 자료보존관 건립
	■ 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전송	⑤ 보존기술 연구, 교육, 홍보활동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의 중장기 기본계획 모형(SBL Project)

다음으로 'SBL Project'에서 제안하는 4대 분관의 연차별 건립순서는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서울의 대각점에 위치하는 부산·경남권에 2010년까지 '부산분관'을 개관하고, 이어 충남 연기·공주 일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시작하는 2012년에 맞추어 약칭 '행복도시분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영남권 교육·학술의 중심지인 대구에는 2015년 개관을 목표로 '대구분관'을 계획하고, 예향인 광주에는 대구분관과 동시에 개관하거나 늦어도 3년 내에 '광주분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4대 국립분관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분관

부산광역시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15구, 1개 군)로 구성된 제2의 도시이며 태평양의 관문이다. 2005년말 현재 총 763.46km²(남한 면적인 99,617km²의 0.77%)에 약 365만 7천명이 거주하며, 서울에서 약 428.1km 떨어진 동남단에 위치한다. 1970년대부터는 국력신장과 더불어 국제 경제권이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안국가로 전환되면서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6개)의 지방이전 대상을 총 176개(50.9%)³⁾로 확정하고 그 중에서 총 12개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분관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미정상태이므로 편의상 '행복도시분관'으로 칭한다.
 3) 167개 기관은 소속기관 67개, 투자·출자기관 26개, 출연기관 54개, 개별법인 26개를 말한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분관 건립계획의 우선순위와 주요 기능

우선 순위	명칭 (가칭)	적정 건립 연도	특화자료 (서비스)	주요 기능						재원조달방식		사업추진체제	
				자료 수집	자료 보존	정보 봉사	정책 지원	납본 거점	인력 연수	부 지	건축비	주관	전담기관
1	부산 분관	2009-2010	해양·물류	◎	●	◎	●	◎	-	지자체 예산	국 고	분관건립위원회	국 중 부산시
2	행복 도시 분관	2011-2012	행정·정책	◎	○	●	○	○	-	국 고	국 고	행복도시건설청	분관건립위원회
3	대구 분관	2013-2015	교육·학술	◎	●	◎	●	◎	○	지자체 예산	국 고	분관건립위원회	국 중 대구시
4	광주 분관	2015-2018	예술·문화	◎	●	◎	●	◎	-	지자체 예산	국 고	분관건립위원회	국 중 광주시

● 주력기능, ◎ 기본기능, ○ 부차적 기능

따라서 서울과 대칭점에 위치한 제2의 도시에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을 가장 먼저 건립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분관은 중장기적으로 가칭 '부산관'(National Busan Library)으로 격상시켜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서울의 중앙관과 부산관으로 구성하는 2개관(서울관, 부산관) 4개 분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복도시분관, 대구분관, 광주분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각도로 언급할 수 있지만, 대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부산분관의 건립은 균형발전과 행정기관의 분산정책에 가장 잘 부응하는 매뉴인 동시에 국가문화기관 분산의 상징적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그 범주에 핵심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이 포함될 때 균형발전정책의 문화적 기대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② 부산에 국립분관을 설립하여 남부권 지식정보서비스를 총괄해야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역량도 제고될 수 있다.

③ 도서관이 신세기의 지식기반사회 및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집

중-부산형'으로 재편해야 하며, 부산분관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것은 중앙관이 이관한 국가 지식문화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위험요소를 차단하는데도 유리하다.

④ 부산분관 건립의 당위성은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이 반증한다. 영국은 요크셔 지방에 위치하는 BLDSCL, 독일은 라이프찌히의 'Deutsche Bücherei'를 편입시켜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거점형 분관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관종을 지원하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때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2) 행복도시분관

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의 대안으로서의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5월 26일에 충남 연기·공주 일대의 약 2,212만평을 부지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의 12부 4처 2청과 그 일부 소속 기관(총 42개 단위기관)을 3년(2012년~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였다. 약 50만명을 적정 인구로 산정한 행복도시

의 교통여건은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10km, 청주공항까지 약 24km이며, 동쪽으로 경부철도 및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도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의 각호에서 규정한 4대 특성, 즉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에 근거하여 다목적 기능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한의 허리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국의 교통요지인 대전·충청권에 부산분관 다음으로 국립분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도 2004년 3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신행정도시에 위치할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라는 제목의 공문(문화정책과-828)에서 국립도서관의 분관설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위치는 대전이나 청주, 그리고 2006년 2월에 충남도청 이전지로 확정·발표된 홍성·예산 등 여러 지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연기·공주 일대의 행복도시에 건립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시작하는 2012년에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부권 연기·공주 일대에 들어설 행복도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국가행정의 파격적인 분산·재편계획이다. 총 42개 단위기관(중앙정부의 18개 부처·청과 소속기관의 일부)이 이전하여 국가행정기능과 보조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무수한 법

제, 행정, 정책, 공공, 통계 등의 정보자료가 필요하므로 국립분관을 설립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이미 오래 전에 국가행정기능의 일부가 대전으로 이전되었지만 아직도 행정정보를 지원하는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복도시에 국립분관을 건립하여 자체 수집하는 자료, 중앙관의 소장자료 및 이관자료,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연계하여 대전·충청지역의 모든 행정기관에 다양한 행정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③ 정부는 약 17,000명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50만명 내외를 행복도시의 적정 인구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망라적 서비스 외에도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려면 최소한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강을 알 수 없다. 다만 계획도시인 만큼 국립분관을 먼저 설립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병행하면서 지역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

④ 행복도시의 교통지리적 여건도 국립분관의 설립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 계획도시에서는 1시간대에 인접한 광역 대도시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전국 어디에서든지 2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는 사통팔달형 고속교통망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분관이 건립되면 중앙관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주민의 국가장서에 대한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구분관

1601년에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0년간 영남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도 경상북도를 배후로 한반도 동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행정구역은 8개 기초자치단체(자치구 7개, 군 1개)로 나누어지며, 면적은 885.7km²(남한 면적의 0.89%)이고 인구는 253만 9천명 정도이다. 비록 대구시가 영남 내륙에 위치하지만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7개의 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울까지의 거리가 295.7km에 불과하고 다른 주요 도시도 200km(대전 161.8km, 부산 122.7km, 광주 195.1km) 내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찍부터 전국적인 교육, 연구, 문화 등의 활동과 교류가 활발하였고, 지금도 영남의 행정·문화·학문·예술을 주도하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간파할 수 있는 사례가 대구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의 특성이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기관 등'이며, 특히 한국의 교육 및 학술진흥을 주도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구를 영남권 교육·학술의 중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구미, 포항, 울산 등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거점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교육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산업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자료수집 및 보존센터가 필요하다. 다만 건립시기는 공공기관 이전연도와 그에 따른 지식정보 수요의 완급성을 고려할 때 행복도시분

관보다 후순위로 계획하되, 늦어도 2015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구체적으로 대구분관 건립의 배경 또는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구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광역시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육 및 학술활동에 있다. 이를 감안하여 중앙정부도 대구에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주에 주요 교육·학술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관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의 중앙관, 부산 및 행복도시의 국립분관에 소장되는 각종 교육·학술·행정자료를 대구·경북의 교육 및 학술계에 제공하고 역으로 타지역으로 발신할 구심체로서의 대구분관 건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국토의 중추 교통로인 경부선(고속도로와 철도)이 관통하는 대구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영남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적 및 물적 이동량이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구분관이 건립될 때 부산분관과 더불어 국가장서 및 정보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경북의 주요 거점도시인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주 등의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서비스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③ 대구지역의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도 국립분관의 설립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2004년말 현재 1개관 당 봉사대상인구는 전국 평균(약 99,761명)보다 1.8배나 많은 약 282,000명에 달하며, 주민 1인당 장서도 0.67권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이러한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서고공간 대비 수장율은 113.2%로 이미 한계수

장율을 초과하였으며, 연간 수집자료의 증가율을 7%로 상정할 경우에 2010년에는 수장공간의 부족율이 무려 5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윤희운 2005, 15-16). 이에 2005년 12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구지역 공동보존도서관 설립문제'를 논의하였다. 물론 지역단위의 보존도서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여러 공공기관이 대구지역으로 이전하고 배후에 거대한 경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장서 및 지역도서관의 이관자료를 보존·제공하는 국립분관의 설립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광주분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는 광주광역시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말 현재 행정구역의 연면적은 501.34km²(남한 면적의 0.5%)이며, 인구는 약 140만명이다. 광주는 호남의 거점도시이며, 남도의 교통 요충지이다. 또한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광주첨단산업단지건설, 생산도시화의 달성, 주거·휴식공간의 확충 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서남권의 명실상부한 중추 관리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대명사는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며, 2003년 5월에 대통령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 메카로 육성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재확인되었고, 동년 7월 문화관광부가 '동북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를 한국의 문화수도로 특화·발전시키려는 의지는 광주에 한국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기관을, 전남에 핵심 문화예술기관(한국문화예술진흥

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을 이전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전력산업 클러스터와 문화·영상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전략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개관시기의 문제일 뿐 국립중앙도서관의 광주분관 건립은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국립분관을 설립하면 광주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지역 내의 지역대표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방법은 없는 가 등에 대한 검토와 반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에 적시한 몇 가지는 분관건립의 정당성을 배가시키는 논거로 삼을 수 있다.

① 우선 국토의 3각 거점(서울-부산-광주)에 위치하는 광주시의 지리적 특성이 국립분관의 건립을 필요로 한다. 광주시는 6대 지역거점(목포, 완도, 여수, 남원, 전주, 부안)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제반영역에 걸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광주의 발전이 곧 호남권 전역의 발전과 개발로 인식할 만큼 서남권의 중핵도시이다. 또한 9개의 광역 고속도로망을 유지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그 중심부에 국립분관이 설립되면 호남인들의 국가장서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력과 향유권도 크게 신장될 것이다.

② 광주시에 국립분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최대의 당위성은 한국 예술·문화·인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데 있다. 그 동안 광주는 대규모 국제문화 이벤트(광주비엔날레, 임방울 국악제, 광주국제영화제 등)를 개최하는 국제적 문화도시로 인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인권도시로 각인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국가도서관

의 음악자료보존소인 베를린 소재의 'Deutsches Musikarchiv'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아비뇽 분관으로서 공연예술자료를 담당하는 'La Maison Jean-Vilar'처럼 한국의 예술·문화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 분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부산이나 대구에 국립분관이 설립되더라도 광주와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전술한 지리적 및 기능적 특성과 더불어 분관건립의 필요성에 일조한다. 광주는 국토의 서남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국립분관의 장서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로 국립분관을 건립하여 예술문화자료를 총괄하고 호남 전역의 지역주민에게 국가장서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말 현재 광주시의 총 12개 공공도서관이 부담하는 봉사대상인구는 1개관 당 116,764명으로 역시 전국 평균인 99,761명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호남권 공공도서관의 시스템적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점도 분관설립의 배경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3.2 중앙관-지역분관의 운영체계 모형

현재 한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다. 다만 형식논리를 빌어 중앙관, 자료보존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시스템의 개체로 간주할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자료보존관이 본관 사이트 내에 위치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지위가 분관이기 때문에 국가도서관시스템으로 규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제안한 권역별 국립분관이 설립되면 그 법적 지위가 역시 분관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분화에 따른 중앙관과 지역분관의 운영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역할분담이 가능하고 건립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 및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운영체계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관과 복수의 지역분관을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려면 각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상적인 방안은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의 경우처럼 가칭 「국가도서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부 소속의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설치·조직에 관한 별도의 법률제정의 정당성,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입법수요의 미약 등을 이유로 개별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도서관법시행령'을 성안할 때 지역분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권역별로 4대 분관을 건립할 경우, 현재의 단순한 국가도서관시스템 구성체계는 복잡한 양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2부 1분관(7과 4팀 1담당관) 체제를 3부 7과(6과 1담당관) 5분관 정도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한 5대 분관시스템을 통괄·지원할 수 있는 가칭 '분관지원부'의 신설이 불가피할 것이다. 만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관장 직속의 별개 하부조직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분관지원부'가 지역단위의 4대 분관을 관리·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산분관의 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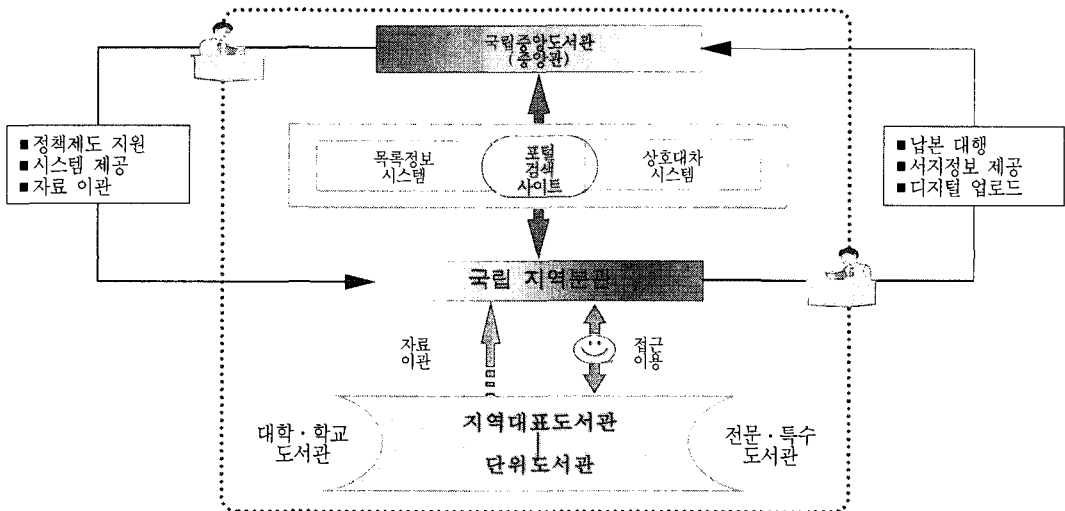
지위를 '국립부산관'으로 격상시켜 서울의 중앙관과 부산관을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양대 축으로 삼고 4대 분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복도시분관, 대구분관, 광주분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법령보완과 조직개편이 가능할 경우, 국가도서관시스템 내에서의 중앙관과 지역분관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중앙관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분관은 대중 밀착형 서비스와 권역별 보존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앙관의 조직확대 및 외연확장이 지역분관의 존재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며, 역으로 지역분관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문화적 역할을 분담해야 중앙관의 입지적 및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가. 이른바 중앙관과 지역분관이 상리공생하면서 자료보존을 전제로 국민의 자료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하려면 <그림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유

기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 모형의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운영체계는 기능분담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통합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앙관 및 지역분관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서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상호대차 또는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② 서울의 중앙관은 국가장서를 수집·관리하는 국가대표도서관, 납본도서관, 보존도서관, 정책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총괄한다. 따라서 권역별 국립분관을 정책적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시스템을 지역분관에 제공하며, 중앙관의 수장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일부 자료를 분관으로 이관한다. 만약 장기적으로 부산분관이 '부산관'으로 격상될 경우, 중앙관은 국가장서의 보존 및 서비스센터로, 부산관은 최신자료의 전국적 접



<그림 4> 국가도서관시스템(중앙관-지역분관)의 운영체계 구성모형

근·이용을 주도하는 도서관 네트워크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영국과 일본 외에도 1991년 1월까지 케이프타운과 프레토리아 소재의 2개관으로 구성·운영되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양자가 통합된 후에는 전자는 국가보존도서관으로, 후자는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 센터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③ 국립 지역분관은 중앙관의 중개기관인 동시에 지역보존센터이다. 납본업무를 대행하며, 국가서지 작성과 종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서지정보 제공, 디지털 자료를 국가디지털도서관으로 업로드한다. 또한 중앙관의 정책기능을 집행하고 지역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며, 중앙관 및 지역도서관이 이관한 자료와 자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의 권역별 거점으로 활동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지역사회에 산재하는 모든 도서관은 보존공간이 부족할 경우, 자료를 국립분관에 이관함으로써 공간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개별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 내지 국립분관과 상호대차 방식으로 주민의 대출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어느 도서관

이든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고 거주지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3.3 중앙관-지역분관의 역할분담 모형

지방분권과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립분관을 직접 건립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중앙관·지역대표도서관·국립분관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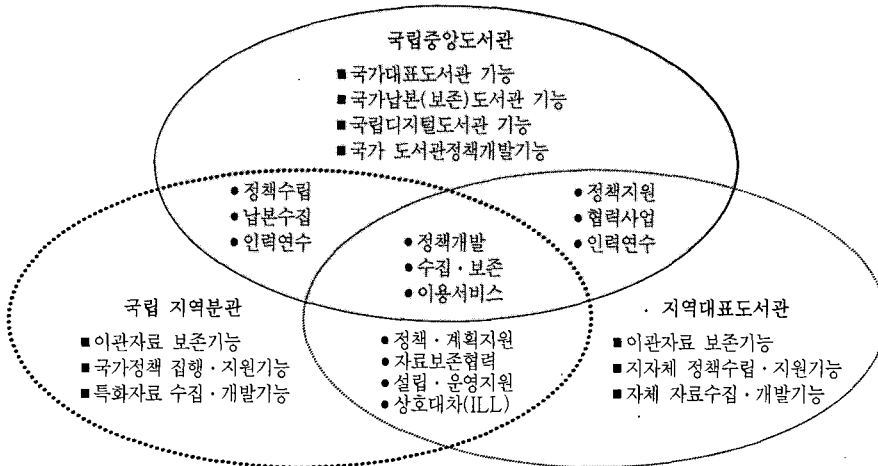
우선 개정된 「도서관법」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8가지로, 광역지자체(시·도)가 설립·운영해야 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제23조 각호에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양자의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정업무 비교

국립중앙도서관(제19조 제1항)	지역대표도서관(제23조)
1. 제14조의 도서관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의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그러나 국립 지역분관은 「도서관법」에 설립 근거만 있고 동법 시행령이 미제정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기능이나 업무를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국립분관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지역분관’으로 사용하는 이상, 그것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인 ‘자료의 주제별 특화’와 ‘접근·이용서비스의 포인트’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국가가 광역시도에 설립하는 거점형 분관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수집한 특화자료와 중앙관 및 지역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별 자료보존관으로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를 구체화하면 도서관정책 집행의 지원, 지역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중앙관 업무의 분담, 권역별 특화자료의 수집과 개발, 중앙관 및 모든 지역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의 보존센터, 교육연수의 대행이나 분담, 납본업무 대행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급한 중앙관, 지역대표도서관, 국립 지역분관의 기능적 공분모와 상관성을 요약·도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국립분관도 일종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본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상당 부분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중첩될 수밖에 없지만, 비중을 달리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기능도 적지 않다. 예컨대 국가장서의 구축은 중앙관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지만 도서관정책의 개발에는 중앙관, 국립분관, 지역대표도서관이 모두 관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수집과 보존업무는 지역대표도서관의 핵심업무인 반면에 지자체의 도서관 설립에는 중앙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업무와 역할은 <표 4>처럼 분담하는 방향으로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립분관은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차별성이 분명해야 하므로 수행하는 업무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국립지역보존센터’ 특화자료의 수집·제공>중앙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지역분관,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적 공분모와 상관성

〈표 4〉 국립중앙도서관(중앙관, 지역분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및 역할분담 모형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중앙관	지역분관	
1. 국가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시행 2. 국내의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8.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국가장서 및 지역도서관의 이관자료 자체 수집자료의 보존센터 운영 2. 권역별 특화자료의 수집·개발·제공 3. 국가 및 지자체 도서관정책 집행의 지원 4. 지자체의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 5. 중앙관 주요 업무의 분담 수행 및 지원 6. 중앙관 납본업무의 대행 7.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대행 또는 분담	1. 광역지자체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의 공공도서관 자료수집 및 보존 지원 이관자료의 보존관리 4.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지역도서관의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 국가대표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7. 기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중개기능)납본대행·교육훈련의 분담' 등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지역분관의 자료보존센터 모형

거점형 국립분관이 중장기 기본모형에서 제안한 경부축 중심의 가치 'SBL Project'에 의거하여 건립되려면 자체 수집한 특화자료와 지역도서관 및 중앙관이 이관한 자료를 보존하는 센터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료보존센터로서의 역할이 여러 개의 국립분관을 권역별로 건립해야 하는 원초적 이유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존립가치를 정당화하는 요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다음에 적시한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우선 수행할 기능의 우선순위를 '특화자료의 수집·제공' 중앙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중개기능' 납본대행·교육훈련의 분담' 등으로 설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분관계획이 국립중앙도

서관의 몸짓 불리기로 매도될 개연성을 회피하고 지역도서관 중에서 대표관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육상옥'을 구상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첩경이다.

둘째, 지역분관은 배후의 광역 시·도를 위한 특화자료 수집에 주력해야 한다. 이미 지역도서관이 한정된 봉사권역의 주민에게 제공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분관이 중복적으로 수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거점도시의 지자체가 추구하는 미래상이나 발전전략,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개발·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부산분관은 해양·물류, 행복도시분관은 행정·정책, 대구분관은 교육·학술, 광주분관은 예술·문화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거나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분관은 중앙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정책적 및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도서관정책이 지역사회에 잘 파급되도록 지역대표

도서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지역차원의 독자적인 발전계획이 중앙정부의 범국가적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중개기능에 충실할 때, 중앙관 및 지역도서관을 이관받을 수 있고 국립지역보존센터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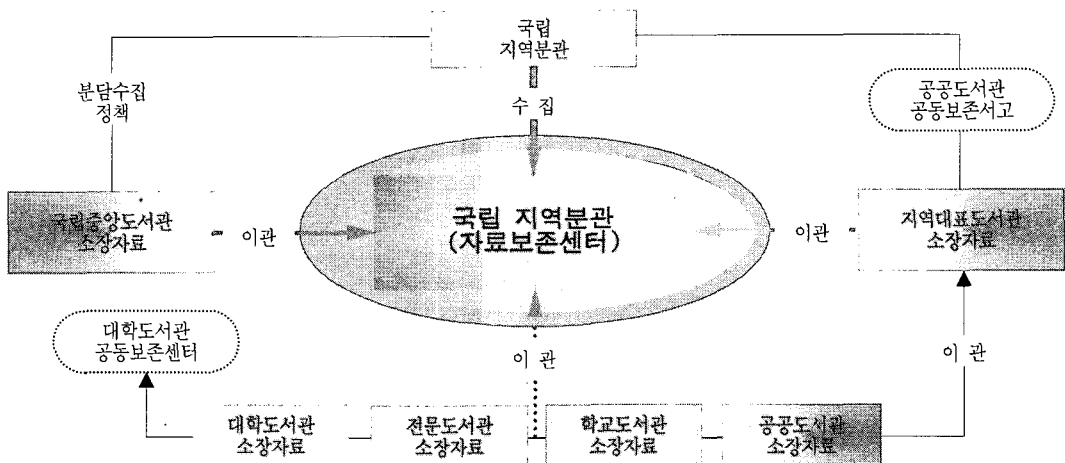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역분관이 중앙관의 납본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자료보존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2006년 6월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총 5,906,632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납본 수집율이 무려 71.7%에 달한다. 따라서 국립분관 건립계획에 포함된 광역 시·도의 경우, 지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하는 납본 대행업무를 국립분관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하는 한편, 기타 광역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이 대행하도록 조정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급한 역할을 감안하여 국립 지역분관이 서울의 중앙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장서를 이관·수용하여 지향해야 할 자료보존센터의 모형을 제안하면 <그림 6>과

같다. 이 모형의 주요 특징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분관이 설립주체와 관종을 불문하고 '모든 정보자료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충실하려면 가까운 장래에 자료보존을 보증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공동보존센터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다만 그 역할을 국립 지역분관에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대표도서관에 일임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거점형 국립분관이 설립되는 광역 시·도의 경우는 당연히 국립분관에 자료보존센터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시·도는 공동보존서고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자료보존센터의 모형은 상호협력과 자원공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료의 이관을 강조한다. 지역분관이 거점형 자료보존센터가 되려면 자체 수집하는 자료와 중앙관 및 지역에 산재하는 여러 도서관이 이관하는 자료로 장서를 구성



<그림 6> 국립 지역분관의 자료보존센터 모형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현실적 난관과 제도적 한계가 실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앙관 자료의 지역분관 이관문제는 인식과 이해의 차원일 뿐 법적 제약은 없지만 다른 지역 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이 소장한 자료는 설립 및 운영주체의 재산이므로 이를 지역분관으로 이관하는데 따른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탁형 보존관리, 물품의 관리전환, 제적·폐기 후에 기증하는 방식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거점형 자료보존센터의 모형에는 중앙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 비록 지역분관의 봉사권역이 제한적이지 않음에도 도서관으로 존재하는 이상, OPAC 검색·열람과 대출·참고봉사·문헌복사·상호대차 등의 정보서비스, 이관된 자료로 특정 도서관의 결락(결호) 자료를 보충하기 위한 재이관 중개서비스, 일정 보존부수를 초과하는 복본을 다른 도서관에 기증하는 재활용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계적이고 완전한 보존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관이 국가장서의 보존정책 수립 및 관련기준의 제정, 중앙관 및 지역도서관의 자료이관을 위한 법제 장치 마련, 국립분관 미설립 광역 시·도를 위한 공동보존 도서관 건립의 지원, 지역별·관종별 보존서고 및 자료중복의 주기적인 조사, 자료보존 및 이관에 관한 세미나·정보교류·기타 관련활동의 전개, 대량 탈산처리 및 파오손 자료의 복원 시스템 구비 및 지원, 자연적 열화 및 인위적 훼손자료를 취급할 전문가 양성, 새로운 보존매체 및 변환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요약 및 결론

지난 60년간 서울중심의 완전 집중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실정법이 규정한 중요한 업무 가운데 특히 수장공간의 확장성과 봉사대상의 전국성을 전제로 하는 '자료의 보존과 이용'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하며, 정부가 주력하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분산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중심의 집중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거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립분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립 분관건립을 위한 중장기 기본모형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부축 중심의 성장축(산업에너지 벨트)과 백두대간 및 농·산·어촌지역의 생명축(생명에너지 벨트)의 연계·통합형 상생공간으로의 재편구상' 가운데 경부축 중심의 성장축을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가칭 'S자형 분관건립 프로젝트'(SBL Project)로 제안하였다. 그 요체는 서울 소재의 중앙집중시스템을 서울과 지방거점의 집중-분산시스템(중앙관-지역분관)으로 재구성하는데 있다. 가칭 'SBL Project'은 시스템적 집중화와 지리적 분산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소위 '집중-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 구축모형'으로서, 서울 소재의 중앙관(본관) 및 분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지방의 4대 거점형(부산·경남권, 행복도시,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국립분관을 중추 성장벨트인 경부축에 위치시키고 연계함으로써 신국토 재편구상에 부합하면서도 중앙관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고 국가장서 및 정보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이용의 스펙트

를 최대한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거점형 국립분관의 연차별 건립순서는 '부산분관'을 2010년, 행복도시분관을 2012년, 대구분관을 2015년, '광주분관'을 2018년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각의 국립분관이 집중적으로 수집할 자료는 광역 시·도의 특성과 상대적 강점, 국가의 권역별 혁신도시 구상, 이전할 중앙부처 및 행정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산분관은 해양·물류, 행복도시는 행정·정책, 대구분관은 교육·학술, 광주분관은 예술·문화로 특화시켜야 한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보존관리를 전제로 각각 이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되, 행복도시분관은 자료보존보다 행정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지리적 여건과 인력수급이 유리한 대구분관에는 사서직 연수기능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중앙관과 지역분관의 운영체계 모형은 조만간 제정될 「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여 장기적으로 부산분관의 법적 지위를 '국립부산관'으로 격상시켜 서울의 중앙관과 부산관을 양대 축으로 삼고 권역별 4대 분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복도시분관, 대구분관, 광주분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앙관과 지역분관이 상리공생하면서 자료보존을 전제로 국민의 자료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중앙관과 지역분관의 역할분담 모형의 경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중앙관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은 동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반면

에 지역분관의 핵심역할은 자체 수집한 특화자료, 중앙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등이 이관한 자료를 보존하는 지역보존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앙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중개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지역분관의 업무 및 기능의 우선순위는 '국립지역보존센터 > 특화자료의 수집·제공 > 중앙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중개기능 > 납본대행·교육훈련의 분담' 등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역분관이 자체 수집한 특화자료와 지역도서관 및 중앙관이 이관한 자료를 보존하는 센터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배후의 광역시·도를 위한 특화자료 수집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도시의 미래상이나 발전전략,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되 부산분관은 해양·물류, 행복도시분관은 행정·정책, 대구분관은 교육·학술, 광주분관은 예술·문화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료보존센터의 모형은 상호협력과 자원공유의 원칙에 입각한 자료이관을 강조하되, 중앙관 자료의 지역분관 이관에는 법적 제약이 없는 반면에 지역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설립·운영주체의 재산이므로 소유권 내지 관리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탁형 보존관리, 물품의 관리전환, 제작·폐기 후에 기증하는 방식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요컨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계획의 요체는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집중·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대표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적 근거와 현실적 당위를 초월하는 고찰과 논증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분관건립을 계기로 도서관 상호대차(중앙관-국립분관-지역대표도서관)와 개인대출(국립분관, 지역대표도서관, 개별도서관)을 혼용하는 '전국통합형대출시스템'을 개발·도입해야 하며, 거점형 국립분관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심층 연구·제시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서 4대 사고의 건립은 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국가정

책의 백미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춘추관, 충주사고, 성주사고는 소실되거나 유출되고 전주사고만 병화를 면한 아픈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반달리즘(Vandalism)은 인류의 역사를 '파괴와 복원의 연속체'로 규정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점형 국립분관의 건립은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2.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 건립 기본계획(프로그램) 수립 기술영역 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5. 『국립중앙도서관 201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5.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盧荷生. 2003. 談國家圖書館之經營. 『國家圖書館館刊』, 1: 17-26.
- 図書館をハブとしたネットワークの在り方に關する研究會. 2005. 『地域の情報ハブとしての図書館: 課題解決型の図書館を目指して』. 東京: 同研究會.
-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編輯委員會編. 1988.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 東京: 丸善.
- 문화관광부. 2002-2006.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윤희운. 2002.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스펙트럼과 지향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41-60.
- 윤희운. 2004. 지방분권과 공공도서관의 향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25-48.
- 윤희운. 2005.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문제와 대안. 『대구 공공도서관 직원 세미나 자료집』. 대구: 중앙도서관.
- 윤희운. 2006.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5-31.
- 윤희운. 2006.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계획의 타당성 분석. 『도서관』, 61(1): 1-44.
- 李叔玲. 1990. 『英美兩國國家圖書館體制與功能之比較研究』. 臺北: 漢美.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Bohrer, Chr, eds. 2000. *Library Legislation in Europe : Discussion, Papers and Country Papers*. Munchen : Council of Europe/Goethe Institut.

- Boulderstone, Richard. 2004. *Fiesole Retreat 2004 : International Library Collaboration*. [online] [cited 2006, 05. 20] <http://digital.casalini.it/retreat/2004_docs/Boulderstone.pdf>
- British Library. 2005. *Redefining the Library : The British Library's Strategy 2005-2008*. London : British Library.
- Cilip & British Council. 2002. *An Investment in Knowledge :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2002*. London : Cilip & British Council.
- Council on Library & Information Resources. 2005. *Library as Place : Rethinking Roles, Rethinking Space*. Washington, D.C. : CLIR.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Framework for the Future : Libraries, Learning and Information in the Next Decade*. London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2001. *Libraries,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for All : Co-operating Across the Sectors to Tackle Social Exclusion*. London : DCMS.
- Fuentes-Romero, J.J. 2004. "National Libraries : Their Position with Regard to Cultural and Ethnic Minorities." *Alexandria*, 16(1): 49-59.
- Goodrum, Charles A. 1986. "National Libraries." In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2nd ed., edited by R. Wedgeworth, et al. Chicago : A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1.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München : K.G. Saur.
- Kempf, Klaus. 2005. "Storage Solutions in a Co-operative Library System : The Case of Germany/Bavaria." *Library Management*, 26(1/2): 79-88.
- Lor, P.J. 1997.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aris: UNESCO.
- Lux, Claudia. 2003. "The German Library System: Structure and New Developments." *IFLA Journal*, 29(2): 113-128.
- Missingham, Roxanne. 2004. "A New Strategic Direction for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lexandria*, 16: 37-48.
- National Preservation Office. 2001. *A National Preservation Strategy for Library and Archive Collections in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 Principles and Prospects*. London : British Library.
- Renoult, Daniel. 1999. "Information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Liber Quarterly*, 9: 343-351.
- Research Support Libraries Group. 2001. *Co-ordinating the Distributed National Collection of Research Resources : Report to the Research Support Lib-*

aries Group. London : The Group,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2001. *Building on Success : An Action Plan for Public Libraries*. London : Resource.

Seefeldt, Jürgen and Ludger Syré. 2003. *Portals to the Past and to the Future : Libraries in Germany*. Hildesheim : Georg Olms Verlag.